

# 기초연금 정책에 수혜금 50% UP

### 지난해 4분기 공적이전소득 29% ↑ ... 5분위 증가폭 가장 커 사회수혜금 증가율 49.6%... 상위 20%에선 2배 이상 늘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구가 받은 수혜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금은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 정도를 차지했다. 절대 수급액은 빈곤층에서 높았지만, 증가 폭은 연금 등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35만2600원으로 1년 전보다 28.9%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6.2%, 이전소득이 11.9%, 재산소득이 4.9%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이나 기

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 정책 효과로 공적이전소득은 소득 수준별 모든 계층에서 늘었다. 분위별로 나눠 보면 하위 20%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17.1% 증가한 44만2600원으로 증가 폭은 가장 작았지만, 수혜액의 절대치는 가장 컸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을 차지했다. 하위 20~40%인 2분위는 30.7% 증가한 43만8500원, 중간층인 3분위는 23.9% 늘어난 31만9700원, 상위 20~40%인 4분위는 31% 늘어난 25만8200원이었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이 30만3900원으로 52.7%나 증가했다. 이 중 공적이전금이 24만200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 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 연금 제도가 상속 단계를 거치고 있으면서 수혜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말 국민연금 수급자는 1년 전보다 3.6% 증가했고 월평균지급액도 특례제의 기준 2.2%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수혜금 등도 5분위 공적이전소득을 늘리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은 1년 전보다 140.9% 늘어난 4만3700원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1만7400원 정도로 비중은 작았지만 1년 전 대비 96.7% 크게 증가했다.

박 과장은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수혜금 등의 증가가 5분위 가구에서의

공적이전소득이 다른 분위보다 더 빠르고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요인"이라고 했다.

이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는 3분위에 가장 많았지만, 3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 증가 폭이 34.1%로 가장 작았다. 박 과장은 "이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이동들이 속한 가구는 2~5분위에 걸쳐 분포돼 있지만 3분위에서 가장 많고 4분위에서도 비중이 크다"고 했다. 사회수혜금 증가율은 1분위에서 42.2%, 2분위에서 43.5%, 4분위에서 55.6를 각각 나타냈다. 전체 가구로 보면 49.6% 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지난 2017년 약 5500가구에서 지난해 약 8000가구로 늘었다. 새로 편입된 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 1년 전 상황과 직접 비교하느라 무리가 있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뉴스시스



농협이 지난 20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안을 협의했다.

## ‘깨끗하고 공정하게’

### 농협,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긴급 회의 개최

농협(회장 김병원)은 지난 20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 주재로 법농협 임원, 집행간부, 지역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추문·갑질·도덕적 해이 등 이른바 생활적폐를 청산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직 조합장의 몇몇 비위가 농협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성추문·갑질·도덕적 해이 등을 3대 청산대상으로 선정, 적발되는 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지원제한, 특별감사, 복무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해당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모든 지원을 제한한다. 신규 자금지원은 중단하고 기존에 지원된 자금은 회수하며, 신용점포 신설을 제한할 뿐 아니라 예산 및 보조, 표창 및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사고확인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무관용·엄정 문책을

원칙을 견지할 계획이다. 특히, 성관련 사고는 감경사유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예외 없이 일벌백계로 중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복무기준을 강화한다. 사업목적 외 불요불급한 해외 연수나 출장을 금지하고 사업목적이라 하더라도 매년 1회 총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원 회장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농협 임직원들의 팔과 노력이 성추문 등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문화를 만들 때 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며, 2월 2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2월 26일~27일 이틀간의 후보자등록을 거쳐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김영태 기자

## 여당도 '제로페이' 비판... "민간 중심으로 작동해야"

### 민주 초재선 모임 부설 더미래연구소 리포트서 지적

###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이 적어 사용동기 별로 없어

여권에서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모바일 지불카드 '제로페이'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소비자와 가맹점, 금융기관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동기가 부족하고, 공공 주도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독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더 좋은미래' 부설 연구기관인 더미래연구소는 20일 공개한 리포트 '모바일 지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 주체인 소비자, 가맹점, 금융기관 등 입장에서 제로페이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누리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제로페이의 사용동기가 별로 없다는 지적은 현실적으로도 타당해 보인다"며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용카드의 최대 장점인 신용공여기능과 각종 부가서비스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적다"며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처럼 단기간 내에 확산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많이 인하여 가맹점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동기가 많지 않다"며 "물론 제로페이의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보다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유인동기가 적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로페이는 사실상 제로가 아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대금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금융기관에게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곧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 모두 계열사로 신용카드사를 가지고 있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제로페이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이득에 반하는 제도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갑대중 정부가 2단계로 추진하고

자 했던 지불카드 전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로페이의 대안으로 민간 주도의 모바일 지불카드 활성화를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구축·감독하고 유인책을 제공하되, 궁극적으로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직접 공공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더라도 혁신의 유인동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정부가 하지 않고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민간 기업이 시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직접 모바일 지불카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모바일 지불카드를 도입·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정책 및 감독정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 농어촌공 전복, 건설현장 안전관리 합동 토론회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전승주 기획전략과장은 21일 군산지사를 방문해 박종만 전북지역본부장, 관내지사장, 공감소장, 현장대리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교육 및 의견청취를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합동토론회'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공사에서 시중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철저한 안전체계 확

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설현장 재해사례 및 안전관리 교육과 함께 전복 관내 현장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토의가 이뤄졌다.

한편, 전북지역본부 3월에 해빙기 건설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승계)는 21일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관내 농·축협 조합장 후보예정자 및 기획담당 상무,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 임실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박종범)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모두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이승계 지부장은 "2019년도 유일의 전국규모 선거인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및 불법선거로 인한 농협전체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줄 바란다"며 "농협 역시 모든 역량을 모아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공명선거실천 협약식 개최

농협중앙회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식)는 관내 지역농협 현직조합장을 대상으로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예정자 모두가 지도자적 양심으로 정책선거를 실천하여 공명선거의 실현수범과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다짐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교육과 함께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이문식 지부장은 "다가오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후보 예정자 모두가 농업인 실익증진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